

건설동향브리핑

社告 추석 연휴로 9월 12일자 건설동향브리핑은 쉽니다

CERIK

제576호
2016. 9. 5

정책동향

- 2017년 정부 예산안, SOC 예산 9년 만에 최저 수준
- 「기업활력법」의 건설 분야 활용 방안

시장동향

- 8월 CBI, 전월비 12.4p 하락한 78.6 기록

산업정보

- 기술 발전에 따른 인프라 수요 변화
- 발주자 아웃소싱 확대로 美 CM/PM 시장 ‘지속 성장 중’

건설논단

- 2016년 해외건설 수주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2017년 정부 예산안, SOC 예산 9년 만에 최저 수준

-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 위해 SOC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

8월 30일, 전년 대비 3.7% 증가한 400조 7,000억원 규모 정부 지출 예산안 확정

-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선 2017년 정부 지출 예산안을 확정 발표함.
 - 이번 예산안은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됨.
 -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① 대내외 여건 및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②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중점 투자, ③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기반 마련임.
- <표 1>과 같이 12개 분야 중 9개 분야의 예산이 전년 대비 확대 편성됨.
 - 일반·지방 행정(7.4%), 문화·체육·관광(6.9%), 교육(6.1%) 순으로 예산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12개 분야 중 SOC 예산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8.2%).

<표 1> 분야별 자원 배분

(단위 : 조원,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률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률
보건복지·노동	123.4	130.0	+5.3	R&D	19.1	19.4	+1.8
일반·지방 행정	59.5	63.9	+7.4	공공질서안전	17.5	18.0	+3.1
교육	53.2	56.4	+6.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	15.9	-2.0
국방	38.8	40.3	+4.0	문화체육관광	6.6	7.1	+6.9
SOC	23.7	21.8	-8.2	환경	6.9	6.9	+0.1
농림수산·식품	19.4	19.5	+0.6	외교·통일	4.7	4.6	-1.5

자료 : 기획재정부 2016. 8. 30. 보도자료

정부 지출 확대에도 불구, SOC 예산 규모는 9년 만에 최저 수준

- 2017년 SOC 예산은 21조 8,000억원으로, 2008년 20조 5,000억원(추경 포함)을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함.
- SOC 예산은 2015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예정임.
 - 정부 총지출은 확대되는 추세임에 반해, SOC 예산은 2015년 24.8조원(추경 포함 26.1조원) 규모에서 2016년 23.7조원, 2017년 21.8조원으로 감소하였음.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SOC 투자 예상 규모는 2018년 20.3조원, 2019년 19.3조원, 2020년에는 18.5조원으로 감소세가 지속됨(<표 2> 참조).

<표 2> 국가운용계획상 분야별 자원 배분(안)

(단위 : 조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2020 연평균 증감률
보건·복지·노동	123.4	130.0	135.8	141.6	147.7	+4.6
SOC	23.7	21.8	20.3	19.3	18.5	-6.0
R&D	19.1	19.4	19.7	19.9	20.2	+1.5
공공질서·안전	17.5	18.0	18.7	19.4	20.1	+3.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	15.9	15.7	15.4	15.2	+1.7
문화·체육·관광	6.6	7.1	8.1	8.4	8.6	+6.8

자료 : 기획재정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6. 9.

SOC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성장 동력

-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SOC 투자와 같은 고정자본 투입 증가와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생산성 증대와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국토 및 지역 개발(0.0304%p), 수송 및 교통(0.0302%p)과 같은 SOC 지출이 사회복지(0.0275%p), 산업 및 중소기업(0.0229%p) 등 15개 정부 지출 분야 중 경제(실질 GDP) 성장에 가장 높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됨.¹⁾
- SOC 투자 감소는 건설 투자, 고용, 민간 소비, 수입, 경제 성장률 부문에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옴.
 - SOC 투자의 1조원 감소는 2016년 기준 7,664억원의 실질 건설 투자 감소, 약 1만 4,000여 개의 일자리 상실, 약 3,500억원의 민간 소비 감소, 약 1,612억 8,000만원의 수입 감소, 약 0.06%p의 경제성장률 감소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됨.²⁾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투자의 중요성 잊지 말아야

- 정부가 목표하는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제고, 국민 안전 개선을 위해서는 SOC 투자를 위한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이지혜(연구위원 · jihyelee@cerik.re.kr)

1) 박승준(2009), “재정 확대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분야별 자원 배분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참조.

2) 박용석, 나경연, 이지혜(2016), “한국의 SOC 수준, 이대로 괜찮은가? 대안은 무엇인가?”, <정책포럼 더민주> 정책간담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기업활력법」의 건설 분야 활용 방안¹⁾

- 건설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과잉공급지표 선정을 중심으로 -

■ 「기업활력법」은 과잉 공급 분야에 속한 정상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에 대한 세제, 금융, 법률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3년 한시의 특별법임.²⁾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통합도산법」 등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 정책과는 다른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임.
 - 조직 재편 활동에 대한 절차의 간소화, 지주회사 규제에 대한 유예 기간 연장, 사업 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세제, 금융, 고용 안정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음.
- 건설기업의 「기업활력법」 활용을 위해서는 건설산업이 과잉 공급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업 스스로 증명하여야 함.
 - 과잉 공급 업종이란 과거 3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낮으며, 당분간 수요 회복이 어려운 업종을 의미함. 더불어, 가동률, 재고율, 고용 대비 서비스 생산지수, 가격·비용 변화율, 기타 업종별 지표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여야 함.

■ 건설산업의 「기업활력법」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건설산업 특성 반영한 지표 필요

- 정책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과잉공급지표의 사용은 「기업활력법」 활용도 저하의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건설산업을 위한 과잉공급지표는 과잉 공급 업종의 선제적 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동법의 취지에 맞게 산업의 현황 및 고유한 특징을 감안하여 선정하는 것이 적합함.
 - 건설산업은 투자와 생산의 반복성과 규칙성이 낮고 주문에 의해 생산을 시작하는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음. 따라서 제조업의 활용 지표인 가동률, 재고율, 가격·비용 변화율 등의 지표만을 과잉공급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건설산업의 과잉공급지표로 정책 및 수주 산업으로서의 특성과 건설기업의 사용 편리성을 감안하여 아래 <표 1>의 지표 사용을 제안함.

1) 본고는 임기수(2016), “「기업활력법」의 건설 분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의 요약·정리한 내용임.

2) 2016년 2월 12일 시행령 공포 후 8월 13일부터 시행 중.

- 과잉 공급 업종의 판단 기준을 5개의 보조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에서 4개의 보조 지표³⁾ 및 건설 지표 중에서 2개 이상 충족으로 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을 제안함.
- 사업 재편을 계획하고 있는 건설기업이 「기업활력법」상의 혜택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잉 공급의 판단 기준 확대 필요.

<표 1> 과잉 공급 업종에 대한 판단 기준(안)

과잉 공급 업종에 대한 판단 기준(현행)	과잉 공급 업종에 대한 판단 기준(변경)
① 매출액영업이익률	① 좌 동
② 5개 보조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② 4개의 보조 지표 또는 건설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가) 가동률 (나) 재고율 (다) 고용 대비 서비스 생산지수 (라) 가격비용 변화율 (마) 업종별 지표	(가) 가동률 (나) 재고율 (다) 고용 대비 서비스 생산지수 (라) 가격비용 변화율 (마) 건설 지표
③ 당분간 수요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 특성상 수요 변화에 가변적 대응이 어려워 수급상 과리가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	③ 좌 동
	①영업이익률 ②매출원가율 ③부채비율 ④유동비율 ⑤총자산회전율 ⑥자기자본회전율 ⑦총자산증가율 ⑧건설매출액증가율 ⑨부가가치율 ⑩총자본투자효율 ⑪업종지표(건설업체수, 건설수주액, 건설기성액, 무실적업체수 등)

- 건설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과잉공급지표의 활용은 사업 재편을 계획하고 있는 건설기업의 과잉 공급 업종 증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원활한 과잉 공급 업종 상태의 증명은 건설기업의 「기업활력법」 활용도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임기수(연구위원 · kslim@cerik.re.kr)

3) 재무비율 분석은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성과 분석 기법이며 작성의 간편함과 해석의 편리함으로 다양한 규모의 건설기업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과잉 공급 산업 적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생산성 지표를 다양하게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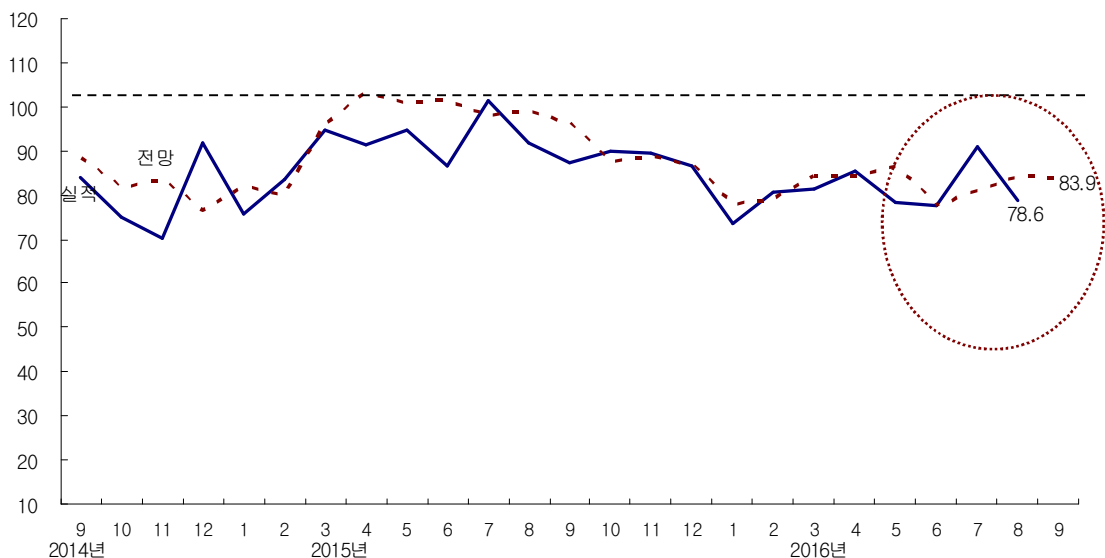
8월 CBSI, 전월비 12.4p 하락한 78.6 기록

- 계절적 요인, 통계적 반락 효과 영향으로 큰 폭 하락 -

■ 8월 CBSI, 2개월 만에 다시 80선 아래로 하락

- 2016년 8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12.4p 하락한 78.6을 기록함.
 - CBSI는 지난 7월에 전월비 13.4p 상승한 91.0을 기록해 11개월래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8월 들어서는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함.
 - 지수 자체도 2개월 만에 다시 80선 아래로 하락해 건설기업의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다시 악화됨.
 - 이는 전월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데 따른 통계적 반락 효과가 일부 영향을 미쳤고, 또한 통상 8월에는 폭서기로 인해 공사 물량이 감소하는 계절적 요인으로 지수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계절적 요인이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됨.
 - 결국 올 들어 CBSI는 지난 1월과 5~6월, 8월 지수가 80선을 하회하며 상대적으로 좀 더 부진한 모습을 보임(<그림 1> 참조).

<그림 1>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기업 규모별로 대형 기업 지수는 전월과 동일, 중견과 중소기업 지수 큰 폭 하락

- 기업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대형 기업은 전월과 동일한 지수를 기록한 가운데, 중견과 중소 기업 지수가 전월비 큰 폭으로 하락함. 특히 중견 기업의 지수 하락 폭이 컸음.
 - 대형 기업 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00.0을 기록해 체감경기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중견 기업 지수는 전월비 24.2p 급락한 78.8을 기록해 지난 1월(76.5) 이후 7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함. 중견 기업의 8월 신규 공사 수주 지수가 전월보다 크게 감소한 것이 지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중소기업 지수 역시 전월비 13.5p 하락한 53.2를 기록해 체감경기 수준이 악화됨.

<표 1> 기업 규모별 CBSI 추이

구분	2015년 10월	11월	12월	20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89.9	89.5	86.7	73.5	80.8	81.4	85.6	78.5	77.6	91.0	78.6	84.5	83.9
구 모 별	대형	100.0	92.3	100.0	92.3	92.3	100.0	100.0	83.3	76.9	100.0	100.0	100.0
	중견	102.8	102.9	93.8	76.5	88.9	83.3	83.8	85.3	90.9	103.0	78.8	87.9
	중소	63.3	71.1	63.0	47.9	58.0	57.4	70.8	65.2	63.3	66.7	53.2	62.5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9월 전망치, 8월 실적치 대비 5.3p 높은 83.9

- 9월 CBSI 전망치는 8월 실적치 대비 5.3p 높은 83.9를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높은 것은 건설기업들이 9월에는 건설경기가 8월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통상 9월에는 흑서기가 끝난 계절적 요인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8월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통계적 반등 효과도 영향을 미쳐 9월 CBSI는 8월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이홍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기술 발전에 따른 인프라 수요 변화

- 미래 기술의 확산, 기술 기반의 건설산업 발전 기대 -

■ 미래 기술의 상용화 진행

- 올 초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으로 인공 지능 기술의 발전이 확인된 것에 이어, 자율 주행 자동차 및 드론의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는 등 미래 기술의 상용이 본격화되고 있음.
 - 차량 공유 서비스사인 우버는 8월 안에 자율 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을 밝혔으며, 앞서 싱가포르에서는 자율 주행 기술을 활용한 택시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음.
 - 지난 29일 미국 연방 항공청은 상업용 드론의 운행 규정을 발효시켰고,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던 아마존의 드론 배송 서비스 등도 시작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맥킨지의 보고서¹⁾는 2030년의 사회기반시설 수요를 전망하면서 정량화할 수 없지만 기술은 향후 사회기반시설의 수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언급함.
 - 어떤 기술은 현재의 사회기반시설을 필요 없게 하며, 반대로 완전히 새로운 수요를 만들기도 할 것임. 맥킨지에서 소개한 사회기반시설, 특히 교통 인프라를 변화시킬 기술로는 ① 자율 차량, ② 드론, ③ 첨단 제조 기술과 첨단 자동화, ④ 첨단 소재와 신재생, 새로운 에너지, ⑤ 디지털화가 있음.

■ 인프라 수요를 변화시킬 기술들

- 향후 십년 안에 자율 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며, 현재의 통행량, 교통 흐름, 대중교통 시스템 등에 변화를 가져올 것임. 현재 자동차의 성능은 이미 자율 주행이 가능한 상태이며 자율 주행 자동차는 시범 운행되고 있는 단계임.
 - 자동차로 이동 중 일하거나 여가를 즐기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이동 시간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경우, 이는 부동산 가치의 변화, 도시 디자인의 변화로 이어질 것임.
- 도로를 사용하지 않는 드론을 통한 배달과 공중 교통관리가 시작되었으며, 도로를 통한 기존의 물류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

1) McKinsey Global Institute(2016. 6), Bridging Global Infrastructure Gaps.

- 3D 프린팅과 같은 첨단 제조 기술과 자동화 기술은 제품의 소비 지역과 생산 지역 간의 거리를 좁힐 것이며, 이에 공급 체인 단축, 컨테이너 운송 감소 등이 나타날 것임.
- 세계 에너지 수요가 신재생, 신에너지로 충족될 경우, 석탄, 석유와 같은 자원의 활용이 감소하고 이들 자원의 화물 운송 패턴과 규모도 변화할 것임. 또한 전기 자동차로부터의 신 전력 수요, 대용량 고효율 전력 저장 시설의 등장 등과 함께 기존과 다른 新전력망(grid infrastructure)의 정비도 요구됨.
- 디지털화 기술은 편리하게 교통량을 추적하고 관리하며, 새로운 교통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것임. 앞으로 등장할 스마트시티는 이를 통해 교통 흐름이 원활히 정리될 것임.
 - 또한 모바일과 광대역 인프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E-커머스는 물류 네트워크의 변화를 가져올 것임.

■ 기술 접목된 건설산업의 새로운 발전 기대

- 건설산업은 일회성에 걸친 유일무이한 사업을 수행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활발히 적용되지 못했음.
 - 세계경제포럼은 한 보고서²⁾에서 다른 산업과 달리 건설산업은 기술 개발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으며 효율이 빈약한 산업이 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살펴본 기술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로봇기술, 뇌과학 등 현재 산업과 접목되고 있는 여러 기술들은 인프라 수요뿐만 아니라 생산비용과 건설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임.
 - 중국의 브로드그룹(Broad Group)은 2012년 15일 동안 30층의 건물을 완성하였으며, 이는 모듈러 공법을 통한 건설 기술의 발전을 보여줬음.
 - 지난 8월 30일 발표한 2017년 정부의 R&D 예산안에는 자율 주행 자동차, 스마트시티, 가상 증강 현실, 경량 소재, 인공 지능, 미세먼지, 탄소 자원화, 정밀 의료, 바이오 신약 등의 9개 분야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음.
- 현재 확산되고 있는 기술들은 사회기반시설에 그동안 예측할 수 없었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근간이 될 것임.

성유경(연구위원 · sungyk@cerik.re.kr)

2) World Economic Forum(2016.5), Shaping the Future of Constr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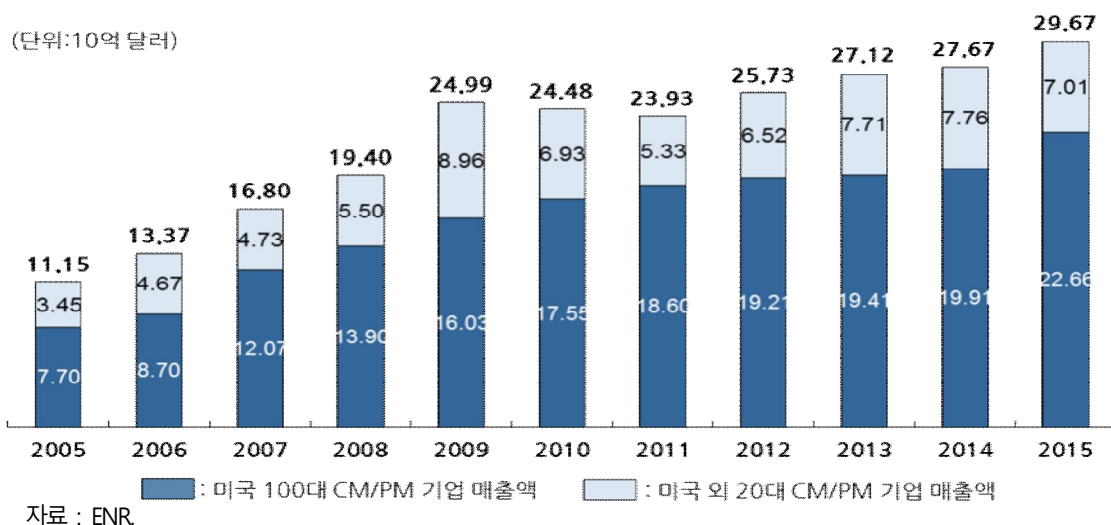
발주자 아웃소싱 확대로 美 CM/PM 시장 '지속 성장 중'

- ENR 자료 분석, CM/PM 기업의 2015년 매출 동향 -

■ 전 세계 CM/PM 시장 2007년 이후 지속 성장세, 미국 시장 호황에 기인

- 최근 ENR지는 용역형 CM¹⁾ 및 종합사업관리(PM, Program Management) 부문의 2015년 매출 실적을 발표함.
 - 미국의 경우 자국 기업 대상 100대 CM/PM 기업 순위를 발표하였으며, 본사 소재지가 해외에 있는 경우 미국 외(Non-USA) CM/PM 실적으로 20대 기업 순위를 발표함.
 - 미국 외 20대 CM/PM 기업 순위에 우리나라 3개 회사가 역대 최대 수로 순위에 포함됨.
- <그림 1>과 같이 2015년 '미국 100대 CM/PM 매출'과 '미국 외 20대 CM/PM 매출' 실적 합산 결과 전년 대비 7.2% 성장하였으며, 2005년 이후로는 연평균 10.3% 성장함.
 - 미국의 경우 전년 대비 13.8% 고성장한 226억 6,000만 달러(25조 3,500억원)를 기록,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미국 건설경기 하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지속 성장함.
 - 미국 외 기업의 경우 저유가로 인한 중동 경기 하락, 유럽 경기 위축에 따른 해당 지역 CM/PM 시장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9.7%로 감소한 70억 1,000만 달러(7조 8,428억원)를 기록함.

<그림 1> ENR 선정 미국 및 미국 외 CM/PM 기업 매출액 동향(2005~2015)



1) 용역형 건설사업관리(CM for Fee) :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 공사에 관한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 단계까지 종합적·체계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

■ 미국 CM/PM 시장의 경우 사업 영역, 사업 지역 확대를 통해 당분간 성장세 지속 전망

- 미국 CM/PM 시장의 경우 건설경기 회복과 더불어 발주자의 아웃소싱 확대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공 발주자의 경우 예산 절감을 위해 건설사업을 관리·감독할 자체 인력 (in-house) 보유를 감축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CM/PM 서비스 활용을 확대하고 있음.
 - 민간 발주자 또한 갈수록 대형화·복합화되는 사업의 효과적 관리 및 클레임 대비를 위해 전체 사업 생애주기(end-to-end)를 대상으로 CM/PM 서비스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임.
- 기존 해외시장 진출에 보수적이었던 미국 CM/PM 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시장 환경 악화에 도 불구하고 아시아 및 영(英)연방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활발히 추진 중임.
 - 2015년 미국 기업의 해외 CM/PM 매출은 60억 달러(6조 7,000억원)로 전년 대비 18.9% 급증함.
- 전통적 CM/PM 사업 영역인 건축 및 인프라 공종 외에도 석유화학, 발전, 환경 시장 등으로 사업 영역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M&A 등을 통해 관련 역량 확충을 꾀하고 있음.

■ 해외 CM/PM 기업의 특성과 시사점

- 미국을 비롯한 해외 CM/PM 대표 기업을 살펴보면, CM/PM 사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소수이며, 시공 및 설계사가 CM/PM 사업을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120개 대표 기업 중 CM/PM 사업만을 수행 중인 기업은 32개 기업으로 전체의 26%에 불과함.
 - 벡텔, AECOM, CH2M, JACOBS와 같은 설계·시공 기업의 경우 기존 사업 영역에서 획득한 전문 기술 및 사업관리 노하우를 기반으로 CM/PM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 중임.
-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CM/PM을 독립적 산업으로만 인식하여 설계 및 시공사의 CM/PM 시장 진출 인식이 부족함.
 - 최근 삼성물산의 해외CM 사업(러시아 락타센터 건설사업관리) 참여와 GS건설의 국내 프리콘 서비스²⁾ 사업 진출 등은 시공사의 사업 다각화 측면에 있어 매우 고무적인 사례임.
- 국내 CM/PM 전문 기업 또한 해외시장 진출 노력 가속화와 더불어 건축 공종 외에도 인프라, 발전, 환경 시장 등으로의 사업 영역 확대 노력이 필요함.

전영준(연구위원 · yjjun@cerik.re.kr)

2) Pre-Con Service(PCS) :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하는 서비스.

2016년 해외건설 수주 전망

연초부터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던 해외 건설 수주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제 금년도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8월 중순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170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5%나 감소한 것이다. 2014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유가 하락은 중동과 중남미 지역의 재정 악화를 가져와 결국 발주 물량의 지연과 취소로 이어졌고, 2015년 중동에서의 수주 부진을 메워준 아시아에서조차도 미국의 금리 인상 시사에 기인한 금융 불안, 중국의 경기 부진, 브렉시트(Brexit) 등의 영향으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그나마 저유가로 인한 중동의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를 걸었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발주 공사도 중국의 입김과 부총재 문제 등 이런 저런 사정으로 국내 기업들의 참여 정도가 의문시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년도 해외건설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먼저 우리 해외건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가를 보면, 최근 사우디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9월 국제 에너지 포럼에서 감산 합의에 나설 것이며,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기대감에 따라 다소 상승세를 보여 배럴당 45~48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014년 배럴당 100달러 선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현 유가는 산유국들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에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만약 연말까지 유가가 50달러 내외에 머무른다면 중동이나 중남미, 아프리카 산유국들의 발주는 여전히 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통령의 방문으로 이란과 체결된 다수의 경제협력 MOU들

이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연내에 계약이 이루어질 프로젝트는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인다.

수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또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영국의 브렉시트가 결정된 지난 6월 27일 1,183.50원을 기록하였던 원·달러 환율(원화 약세)이 이후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8월 16일에는 1,093.50원으로 급락(원화 강세)하였다가 17일에는 하루 만에 14.8%가 상승하는 등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하던 금융시장이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단기간에 큰 폭의 환율 변동을 겪으면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만약 원·달러 환율이 지금과 같은 하락세로 지속된다면(원화 강세) 결국 수출 경쟁력 저하로 귀결되어 해외건설의 수주 경쟁력에 적신호가 될 것이다. 또한, 신흥국들의 금융 시장 불안과 실물지표 둔화도 연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당분간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년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외국도 재정 운영상 연말에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아 남은 몇 달 동안 그간 추진했던 프로젝트의 수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최근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캄보디아와 쿠웨이트의 스마트시티 등 대형 프로젝트가 연내 성과를 거둔다면 지난해 실적에 비근한 실적 달성을 기대할 여지도 없지 않아 보인다.

선부른 희망보다는 기업, 정부,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타임즈, 8월 19일>

김민형(연구위원·mhkim@cerik.re.kr)